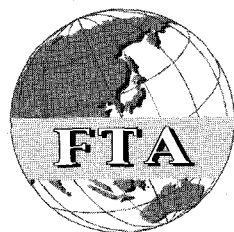


농업선진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1. 들어가며

4월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는 불발로 끝났다. 「FTA 이행 특별법」 제정과 「FTA 이행 특별기금」 신설 문제로 정부내 각 부처들은 첨예하게 맞섰다. 또한 한농연과 전농 등 농민단체들의 줄기찬 투쟁이 이어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 특별법」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한-칠레 FTA의 원만한 비준 처리에 부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 연설에서 한-칠레 FTA의 비준을 요청했고, 각종 신문 및 언론을 통해 한-칠레 FTA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4월 29일에 대통령직속 농어업 태스크포스(T/F) 1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특별법」 및 「한-칠레 FTA 후속대책」에 대해 집중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한-칠레 FTA 추진 및 '사후약방문' 식 FTA 후속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한-칠레 FTA의 비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서 농업 선진국인 일본과 칠레·미국이

FTA 체결시 농업부문 보호를 위한 대응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FTA 추진시 자국 농업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TT 24조(실질적인 관세 철폐)에 대해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2. 일본의 대응 - 농산물은 실질적인 관세 유지, 무관세 품목만을 협정에 추가

일본의 FTA 농업 부문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FTA 추진시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WTO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FTA 협상 상대국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검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 접근방식이다.

둘째로, 일본 정부는 식량안전 보장과 농업구조 개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FTA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며, 농산물 평균관세율이 12% 밖에 안돼

EU(20%)나 아르헨티나(33%)보다도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FTA로 인한 농산물의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셋째, FTA 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국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가능한 한 일본 농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협상 이전부터 “일본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를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국내 대립을 자극하는 논의가 함부로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 외교통상부 및 주요 경제부처 관료나 재계·학계 인사의 돌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대응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철폐(WTO 협상 당시 합의한 것)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DDA 협상에 맡긴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는 한-일 FTA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산물은 실질적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관세 품목만을 협정에 추가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김태곤, 「세계농업뉴스」 중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뉴스”에서 인용)

3. 칠레의 대응 - 자국 식량작물 및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관철

1970년대 중반 피노체트 독재정권 당시부터 일방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칠레마저도, 자국의 취약한 식량작물과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FTA에서 많은 예외조치와 보호조치를

관철시켰다. 칠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국과 유럽연합(EU)·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각료회의(APEC)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국의 취약산업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한-칠레 FTA 가서명 직전에 관철시킨 금융시장 개방 논의의 유예 방침이다. 작년 10월 6차 협상 때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 한-칠레 FTA의 체결을 추진했던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칠레 정부는 자국 내 법령을 근거로 한-칠레 FTA 발효 4년 후에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협정 부속서에 명시했다.

이는 여타 국가와의 FTA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991년 체결된 칠레-멕시코 FTA에서 양국은 분유·신선 및 가공치즈·포도·밀·식물성 식용유 등을 예외품목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금융시장, 정부구매 문제 등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에 조정하기로 하였다.

남미자유무역지대(MERCOSUR)와의 FTA에서는 농산물 관세를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밀과 밀가루 등의 품목은 18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가격안정대제도를 운영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와의 FTA에서는 문화산업·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관세할당제도 등을 예외로 하였다. 특히 낙농제품·닭고기·계란·배합사료는 일정 쿼터 물량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4. 미국의 대응 - 각종 FTA에서 자국 농축산물의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를 시작으로

1994년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을 통해 무역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또한 FTA 추진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각종 FTA 추진시 다수의 농축산물을 예외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례로 NAFTA 체결시 캐나다와 유제품·땅콩·설탕·목화 등 58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멕시코와는 1994년부터 15년 동안 네 단계로 나눠 농산물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 농산물 수출 증대를 노리는 미국의 2중성이 NAFTA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NAFTA에는 가입국간 농산물 수입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을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케언즈그룹(농축산물 수출시 수출보조금을 주지 않는 국가들의 모임)의 의장 국가인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미국은 중요 품목인 쇠고기, 설탕, 유제품 등의 농산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품목들에 있어 수출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호주 농업에 대한 미국 내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5. 첫 단추부터 잘못된 낀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정책 - 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의 대외개방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명분으로 졸속 추진된 한-칠레 FTA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실패한 FTA라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정부가 마련중인 「FTA 이행 특별법」과 「한-칠레 FTA 후속대책」 또한, 주먹구구식 정부 행정통계에만 근거한 불충분한 지원대책이며, 이마저도 국내 농업생산력의 급격한 붕괴만을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밖에 되지 못한다.

적어도 노무현 참여 정부는, 김대중 전임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FTA 추진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검증 과정을 시작했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대외개방 및 국가신인도 개선 등의 전시효과만을 위해 진행된 전력 민영화 정책 등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형적인 농업 파탄 정책인 한-칠레 FTA에 대한 재검토 및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농업과 비농업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상황이다.

무분별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가뜩이나 어려운 400만 농민들의 명줄을 쥐어뜯 뿐만 아니라, 노무현 참여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지방 활성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전략산업인 농업의 붕괴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식량주권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미국 등 농산물수출국의 농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400만 농민들의 거친 저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허울뿐인 「FTA 이행 특별법」을 들이대면서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FTA 추진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과반수가 넘는 137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칠레 FTA는 절대 안된다. 뻔히 있는 낭떠러지마저 무시하며 돌진하는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인농연